財務管理研究 第十卷 第一號(1993.6)

金融實名制와 企業 財務政策의 方向

-中小企業의 側面-

李 炳 均*

Ⅰ. 머릿말

80년대말부터 심화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침체현상은 경제전반에 非效率性을 가중시켜 경제운영상의 기본틀을 정비하지 않고는 더 이상 어떤 經濟活性化 施策도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했다. 이같은 현실인식하에 지난 8월 12일에 단행된 금융실명제는 정치 사회적으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건전하고 정직한 사회풍토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통한 실물거래의 陽性化를 유도하여,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그 실시의 당위성이 폭넓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마디로 금융실명제는 '틀'의 정비, 제도의 개혁으로써 우리의 정치 사회기강을 바로잡고 건전한 國民經濟發展의 초석을 다지는 신정부의 意志를 종합적으로 천명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금융실명제가 그 동안 지속되었던 去來慣行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충격을 감소시켜 제도정착의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문제점과 이의 개선을 통한 順機能의 활성화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금융실명제의 충격으로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경제주체는 예상했던 대로 中小企業들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먼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자금조달측면과 경영활동 위축측면에서 점검하고, 당면문제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취해져야 할 制度的 補完에 대해 언급한 후에, 금융실명제하에서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財務政策에 관해 논해 보고자 한다.

---

* 中小企業 協同組合 中央會 副會長

실명제의 역기능시 문제점				
자금 조달 관련	사채시장의 위축	제도권금융의 대체 불가능	중소기업 자금난 가중 실세금리인상	경영활동 위축
	현금보유의 증가	실물투기와 과대소비	물가자극과 자본비용증대	경쟁력 약화
경영 활동 관련	무자료거래 불가	자료노출 기피	거래감소와 판매부진	
	음성거래 양성화	세부담의 증가	세금회피목적의 생산축소	증가

단기수혈식의 정책시행에서 벗어나,
금리자율화, 금융자율화 등과 같은
하부구조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금융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업 자금조달과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제거

실명제의 순기능시 기대효과				
자금 조달 관련	사채시장의 위축	제도권금융에서 흡수	금리의 안정화	경영의 활성화
	음성거래 양성화	간접금융비용의 제거	실질금리비용 하락	경쟁력 강화
경영 활동 관련	무자료거래 불가	기업의 내부경영혁신	효율성, 생산성 증대	
	국가세원의 확대	간접비용의 감소 세수의 증대	기업의 영업비용 감소 세율인하와 정부지출증대	불확실성 감소

II. 金融實名制의 實施와 中小企業의 隘路事項

1. 資金調達의 隘路事項

중소기업의 경우 財務構造가 취약하고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낮아 사채의존도가 높은 실정인데, 중소기업의 23.2%가 運轉資金 부족시 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특히 20인 미만의 소기업은 私債利用率이 40.7%에 달하고 있다.(〈표1〉참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실명제의 전격실시는 私債市場의 전면위축을 초래하여 운전자금의 조달 및 어음할인을 주로 사금융시장에 의존하던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원을 차단하였고, 더구나 그것이 制度金融圈으로 대체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난은 한층 가중되었다. 다소 담보력이 있거나 과거부터 은행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던 기업들은 실명제실시 이후 어음할인한도 부족 등의 문제는 있으나, 대체로 큰 무리없이 新規借入이나 어음할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에 주로 사채시장을 활용하던 기업들은 은행의 자금부족과 보수적인 대출자세 등으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 1〉 中小企業의 規模別 私債利用 現況 (단위 : %)

구 분	5-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인 이상	전 체
사채이용율	40.7	21.8	11.3	5.9	3.7	23.2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93년 1/4분기 중소기업경영실태 및 동향』 1993.6

또한 실명제실시로 가장 우려되는 비관적인 경우는, 예금인출과 실명화 기피자금의 제도금융권 이탈 등으로 현금퇴장이 심화될 경우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실세금리가 대폭 상승할 우려 또한 아직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2. 經營活動의 萎縮

지난 해부터 지속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없었더라도 景氣不振은 면치 못할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점에 금융실명제의 전격실시로 경기위축을 가중시킨 것 또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무자료거래 등 음성거래가 양성화됨에 따라 자료노출을 기피하는 거래처의 去來中斷 또는 減少로 판매부진과 그에 따른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稅源露出과 非實名計座의 실명화 과정에서의 세무조사 및 상속세, 증여세 부과 등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투자 및 경영활동의 위축을 암암리에 가져오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직은 심각한 현상으로 포착되지는 않고 있으나, 자금시장을 이탈한 자금이 일정기간 퇴장후 부동산 등 實物資産의 투기를 자극하거나 過消費로 연결되어 물가를 불안하게 할 경우, 중소기업의 자본비용 증대 및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投資意慾을 저하시키게 되어 중소기업의 기반자체를 허물어뜨릴 염려와 더불어 동남아 등지의 低生産基地(off-shore)로의 생산거점이동을 가속시켜 갑작스런 産業空洞化현상을 초래할지도 모를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

Ⅲ. 資金市場의 機能正常化와 中小企業의 經營安定化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가중되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수차에 걸쳐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은 주로 『긴급운전자금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자금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輸血政策'이었다. 이러한 시책으로 우려했던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고 심각한 위기는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원활하지 못한 상태이며 불확실성의 팽배로 경제운영상의 불안정성 또한, 아직은 불식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금융실명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미비된 제도, 즉 금융실명제와 맞지 않는 下位制度를 개선해야지, 당면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혈정책으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금융실명제가 중소기업에 주는 의미는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통하여 실물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해 無資料去來의 성행을 막고, 중소기업의 높은 사금융의존도를 낮추는데 있다 하겠다. 이로인해 중소기업은 이전보다 높은 稅負擔을 안는 반면, 이전보다 낮은 자금조달비용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채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전보다도 더 높은 자금조달비용이 들고 있다(私債利子率이 월 3.2%～4.5%에 달함). 사채시장이 아직 상존하고 있고, 더구나 사채공급의 축소 및 위험부담에 따른 프레미엄으로 자금수요자가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즉 금융실명제로 예상했던 사채시장기능의 제도금융권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아직도 중소기업의 제도금융권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둘째, 금리자유화 및 금융자율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 역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높은 危險負擔을 안고 선뜻 대출해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 성공적인 조기정착 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난 해소로 經營安定化를 속히 가져올 수 있으려면 금리자유화 및 금융자율화와 같은 제도적 보완조치로 시장기능에 따라 제도금융권내에서 중소기업이 信用度別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실명제 실시 이전이나 현재의 實效資金調達費用보다 더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로인해 중소기업경영의 안정화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중소기업의 인적 시간적 낭비가 상당히 절감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국민경제라는 대국적 관점에서 보면 국민경제 전체의 운영상의 확실성을 제고시켜 정책의 透明性을 높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Ⅳ. 金融實名制下의 中小企業 財務政策

이제까지는 금융실명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그리고 현재의 과도기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제 금융실명제라는 주어진 틀안에서 과연 개별 중소기업의 재무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대내 외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부진 및 판매대금회수지연으로 중소기업의 資金循環(cash flow)은 압박을 받고 있으며, 더구나 침체의 파장이 아직도 길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 및 불투명한 국내경기는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財務構造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사실 금융실명제는 거래의 양성화로 기업, 특히 그동안 무자료거래의 관행이 팽배했던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이전보다 가중시킬 것이며 제도금융권 이용이 용이해지지 않는 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또한 가중될 것이 확실이다. 이와같은 대내 외적인 經濟與件은 기업의 재정운영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실명제가 정착되면 금융거래이외에 거의 모든 實物去來도 제도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과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금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금융기관이 信用(credit)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데 있다. 여기서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금융 및 금리자율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에 의해 信用配分이 이루어져서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신용이 부족한 기업은 자율적으로 신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금융 및 금리자율화가 지연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이전보다 더욱 악성의 사금융시장이 존속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실명제 자체가 중소기업에게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금융기관의 危險을 분산해 줄 중소기업의 信用保證制度가 필연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금조달은 물론 내부수익율과 자금조달비용간의 損益-費用分析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필요한 자금이 기업내부자금에 의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판매활동을 증대시키는 것이 재무전략을 용이하게 하는데 최상의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 경영안정 및 성장에 주효하리라는 것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최근들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기업보다 해외시장정보에 상대적으로 劣位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존의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다.

V. 맺음말

결론적으로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중소기업의 재무정책은 특별한 王道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단지 금융실명제가 중소기업경영에 負擔要素가 아니라,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과도기를 극복하기에 급급한 지원책보다는 위에 언급한 제도적 보완책이 조속히 실시되어, 게임의 규칙이 확정됨으로써 不確實性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기업경영활동 환경조성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개별 중소기업보다는 정책당국의 역할이다.

한편 개별중소기업은 거래금융기관과 착실히 신용을 쌓아감과 동시에 판매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재무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하겠다.